

용산참사·개각·미디어법 시국 3대쟁점 여야 설 대결

정치권이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용산 참사와 개각, 쟁점 법안 등에 대한 홍보전략을 다시 세우며 설 민심 잡기에 총력 태세를 갖추고 있다.

당초 쟁점 법안에 대한 홍보전략만 세웠던 정치권은 개각과 이후 벌어질 용산 참사로 민심의 관심과 방향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한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용산 참사=이번 설 민심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자·철거민 등 민권층 문제와 직결돼 있는 데다 '1·19 개각' 직후 발생한 대형 사고라는 점에서 한나라당에 부담이 큰 쟁점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번 사고를 조기 수습하는데 당력을 결집하고 있다. 당내에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자진 사퇴를 중용하는 목소리를 높여온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사회질서 붕괴, 막무가내식 과격 시위 등은 선전 사회와 맞지 않는 이해관계 표출 방식이라는 점을 공론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여론을 강하게 몰아붙일 수 있는 호재다.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와 속도전이 불러온 필연

적 비극으로 규정, 대통령 사과와 총리 사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설 민심에 한복판에 이 문제를 던져놓자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특히 여론이 김석기 청장의 자진 사퇴 등으로 사태 확산을 막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꼬리 자르기'로 규정, 정권 차원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로 했다.

◇개각=설 전 단행된 개각에 대해 서도 여야간 시각차가 확연해 설 법안의 화제가 되기에 충분하다.

한나라당은 이번 개각을 통해 국정 드라이브에 가속도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전문성 위주의 개각'이라는 점을 소속 의원들의 귀향 활동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측근 포진을 통해 공안통치 기반을 구축, 'MB악법' 밀어붙이기 기반을 다진 'KKK(경북·고려대·공안통) 인사'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구전 홍보전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호남권에서는 '인사 소외' 비판이 그치지 않고 있어 민주당에서는 이를 충분히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미디어법=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법안은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법이다. 때문에 여야는 이날 초 '휴전'에 합의한 이후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홍보가 부족했다는 인식하에 미디어 관련법의 '진'의'를 대대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가 미디어산업의 병목현상을 심화시킨 만큼 경제활성화와 원활한 소통을 만들어주는 '개혁법'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여권이 미디어 산업법으로 포장, 지상파 TV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군사정권식 방송장악에 나섰다"며 대대적인 구전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또 쓴소리 "조기진압 이해못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용산 참사'와 관련해 화를 많이 냈던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용산 농성자 사망사고에 대해 "왜 그렇게 빨리 진압에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왜 그렇게 기다리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최근 한 사석에서 박 전 대표를 만났던 이 측근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박 전 대표가 강경진압에 대해 굉장히 화가 난 것 같다"면서 "농성 시작 25시간 만에 진압이 이뤄졌는데 강경진압이 너무 빨랐다는 생각이 분명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 전 대표는 또 "그렇게 급한 일이었느냐"며 "순식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면서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주승용·김성곤·유선호·김영록 국회의원,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임홍식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전남도당 상무위원회 및 신년 하례식이 열렸다.

"모두 힘모아 경제 위기 극복하자"

민주당 전남도당 신년 하례식

민주당 전남도당이 지역 국회의원, 경제계, 학계 등 각계 인사 초청해 신년 하례식을 갖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다짐했다.

22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도당 신년 하례식에는 주승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곤·유선호·김영록 국회의원, 정종득 목포시장, 오현식 여수시장, 노관규 순천시장, 전완준 화순군수,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윤영관 광주MBC 사장, 임홍식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고갑무 광주공회 회장, 고정주 발명진흥회장 등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승용 전남도당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악의 경제 위기로 지역민들이 상실감에 빠져 있다"며 "정치권과 경제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김성곤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의 '반민주적 악법'을 막아냈던 것이 당원들이 땀땀 땀기 때문이다"며 "이를 교훈으로 계승·지역간 통합을 이룩하자"고 역설했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은 앞서 제2차 상무위원회를 개최해 지역위원회 대의원 3천910명을 인준하고 예·결산을 승인했다.



22일 조선대 치대에서 광주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정두언 의원 등이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왜 호남기업만 퇴출대상 됐나"

한나라 정두언 의원 등 대학생과 토론

"미네르바 사건을 보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이 현장 민심을 들으러 온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쓴소리를 쏟아냈다.

22일 오후 조선대 치과대학 1층 회의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제게 말하세요-리슨님 투어' 현장에서다. 이날 투어에는 광주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정두언 의원과 조전혁·강용석 의원, 김성훈 디지털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전남대·조선대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60여명은 미네르바 구

속, 미디어법 등 쟁점 법안, 지역경제 위기, 4대강 살리기, 용산 철거민 참사 등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정책을 따져 물었다.

호남대 김경문씨는 "중견기업인 대우건설과 C&중공업의 퇴출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며 "왜 유독 호남기업만 대상이 됐고 청년실업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두언 의원은 "20~30대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어 자리를 마련했다"며 "현장 민심을 듣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강만수 경쟁력위원장 내정은 배짱인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퇴임 후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1·19 개각'으로 물러나게 된 강 장관이 사실상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에 내정됐다"면서 "강 장관이 장관 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조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경제팀 핵심차원에서 물러났지만 이 대통령의 신임

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권은 "완전히 배짱인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한 해 그토록 국민을 실망시켰으면 최소한 눈치는 볼 줄 알았다"며 "그러나 자리마다 충성을 맹세한 측근들이 그와 함께, 누가 뭐래도 내 맘대로 가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방의원 징계권 추진은 길들이기"

전남도의원 민주당 하례식 집단 불참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22일 열린 민주당 전남도당 신년 하례식 및 운영·상무위원회를 집단적으로 '보이콧'해 파문이 일고 있다.

골프 외유로 물의를 빚었던 민주당이 최근 지방의원 징계요구권 신설과 관련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한 반발 때문이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오후 5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 전남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하례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전남도의원들은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 주민에 의한 지방의원 징계요구권을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

던 것에 반발해 집단적으로 하례식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은 지방의원들의 저항에 따라 철회됐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회 의원 49명 중 박인환 의장과 박홍수 운영위원장, 여수 출신 도의원 등 10여명만 참석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49명은 지난 21일 긴급 회동을 갖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지방

자치법 개정안 발의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전남도당 신년 하례식 참석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도의원들은 "지방의원들은 주민 소환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요구권을 신설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이라며 "골프 외유로 파문이나 일으키지 말고 국회의원들이나 잘하라"고 반발했다.

법률 개정안 발의에 서명했던 주승용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신년 하례식에서 "지방의원 징계요구권이 들어 있는지 모르고 보좌관이 대리 서명했다"며 "의원들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분명 잘못된 법안이다"고 공식 사과했다.

전남도의원들은 주 위원장이 공식 사과함에 따라 설 연휴 이후에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자치단체장 등이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다 논란이 일자 10여 일 만에 이를 철회했다.

/최권일기자 cki@

2010학년도 대수능 대수생 종합반 모집안내. Includes details about the course,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Shin Hangeo' (신행안내) featuring a 'Shin Hangeo' logo and various service details.

Advertisement for 'IONIA'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무료체험판모집' (Free Trial Version Recruitment).